

제 285 호

2026 년 7 월 16 일
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1. 신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대서양 동맹

- ▶ 발행기관: Foreign Affairs
- ▶ 저 자: Wolfgang Ischinger
- ▶ 일 자: 2026년 7월 6일
- ▶ 개 요

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유럽이 미국 안보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나토 탈퇴 위협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등을 통해 동맹간 신뢰를 흔들어 옴. 하지만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, 우크라이나 군사·재정 지원을 주도하며 자체 방위역량과 방산 기반을 강화해 '능동적 동맹'으로 전환 중임. 문제는 미국이 주요 사안들을 유럽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 대미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, 이는 유럽이 미국을 배제한 자체 방위 옵션을 모색하게 하는 위험을 낳음. 현재 나토는 미-유럽 동맹을 재설계할 것인지, 아니면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마주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있음.

[원문링크 클릭](#)

2.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협정의 중요성을 알린 중국의 SLBM 시험

- ▶ 발행기관: Center for Strategic & International Studies
- ▶ 저 자: Joseph Rodgers, Bonny Lin, and Leon Li
- ▶ 일 자: 2026년 7월 7일
- ▶ 개 요

2026년 7월 6일 중국은 남중국해의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에서 ICBM을 발사해 약 7,300km를 비행시키며 처음으로 SLBM을 국제공해로 쏘아 올리는 실사격을 공개적으로 시연했음. 탄두는 남태평양 비핵지대 해역에 낙하했고, 비행 궤적상 필리핀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됨. 중국은 이를 "연례 훈련의 일환"이라 설명했지만, 호주-피지 방위협정 체결, 림팩(RIMPAC)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, 중-러 합동해상훈련과 시점이 겹쳐 다분히 전략적인 정치·군사적 행보로 해석됨.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헤이그행동규범(HCoC) 가입을 포함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협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냄.

[원문링크 클릭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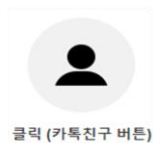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285 호

2026 년 7 월 16 일
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<KIMS 카톡 채널>



3. 미 해군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

- ▶ 발행기관: The National Interest
- ▶ 저 자: Brent D. Sadler
- ▶ 일 자: 2026년 7월 9일
- ▶ 개 요

2016년 미 해군은 355척 함대를 목표로 삼았지만, 단기간에 숫자를 늘리기 어렵기에 전략적으로 운용 방식과 지역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. 이란과의 충돌, 카리브해·우크라이나·중국 해군 부상 등으로 해상 위협이 다중화되면서, 미 해군은 러시아·그림자선단·이란 등을 동시에 고려해 남중국해와 아라비아해(인도양)를 두 '결정적 해상전장'으로 삼아 전력과 지휘구조를 재편해야 함. 이를 위해 인도양 방위를 포괄하는 지휘통합, 제5함대 책임구역 확대, 남중국해 전담 제1함대 부활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. 또한, 한동안 함정 규모가 바닥을 찍을 미 해군이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면 이런 조직·전략 조정이 시급함.

[원문링크 클릭](#)

4. 동북아에서 한-일 밀착을 부추긴 트럼프

- ▶ 발행기관: East Asia Forum
- ▶ 저 자: EAF Editors
- ▶ 일 자: 2026년 7월 13일
- ▶ 개 요

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관여 축소로 한-미-일 동맹 신뢰가 흔들리면서,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 현재 한-미-일 3각 협력은 관성적으로 유지되고,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주도의 외교는 사실상 멈춘 상태임.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상호 취약성을 공유하지만,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서로 다른 대북관계 등 정치적 제약이 큼. 미국 없이 한-일이 주도하는 대북외교를 추진하려면 현실적 타협과 국내여론 관리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며, 그럼에도 북핵을 외면하거나 시간 벌기에 의존하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.

[원문링크 클릭](#)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